

남북한 함께 사는 길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지난 3일로 동서독이 통합된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15년이 지난 지금 동서독 간은 외형상의 정치적, 제도적 통합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진정한 내적 통합은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그동안 동독 지역에 1,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경제적 격차가 오히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 정서적 갈등의 골이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동서독 지역간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이 확연히 갈려 지역 감정이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동서독간 경제 격차와 지역 감정 문제는 통일 후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독일의 주요 정책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동서독 통일의 경험은 세계 유일의 냉전 체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남북한의 1인당 GNP 격차는 10대 1에 이른다. 통독 당시 서독의 1인당 GNP는 동독의 25배에 불과했다. 더구나 동서독은 분단 직후부터 통일까지 지속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계속해 왔다. 이처럼 남북한보다 통일 조건이 좋았고 준비 기간이 길었음에도 동서독은 여전히 물리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원만한 통일과 화합을 위해서는 독일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 회담이 극적인 타결을 보았을 때 불거진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북 지원 비용 문제였다.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및 송전 비용과 경수로 건설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총 6조 5,000억 원에서 11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다양한 남한 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도 힘겨운 남한 재정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 부담이 그만큼 더욱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다. 동서독의 예를 보면 한반도 통일 이후에 통합 비용을 줄이는 것은 통일 이전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순차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불시에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통일 비용은 계산 방법에 따라 수천조 원에까지 달한다. 이같은 막대한 비용 지출은 지금의 독일처럼 남북한 경제를 모두 저성장 국가로 전략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북한에 대한 순차적인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가 성장하도록 돕고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남한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나큰 도움을 준다. 우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가 낮아져서 국가 신용도가 올라간다. 이는 기업들의 대외 차입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남북한의 긴장이 해소되고 북한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남북한 지역 모두에 내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해소되면 남북한 모두 막대한 국방비와 인력을 경제 성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북미일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으로 미일 등의 투자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어 북한 전반의 개발이 본격화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과 만주, 몽고, 시베리아, 중국을 잇는 대규모 물류 기반이 확충되면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 가져다주는 유무형의 실익은 북핵 타결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몇 십 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남북한은 냉전 체제에서 그동안 서로간 경쟁 대상이요 부담스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발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생과 보완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당분간 남한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